

2030년 첫 양산 목표 ‘속도·협력’ 강화해야

호남 반도체 대전환 대한민국 산업지도 바뀔다

〈5·完〉성공 조건

군공항 이전·산단 조기 착공 선결 과제
규제 해소·인허가 단축 등 총력 대응을
전력·용수 인프라 국비 지원 확대 필요
정치권 초당적 협력·상생전략 마련도
전문인력 확보·연관산업 육성 등 중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남광주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비상관제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2일 광주 군공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 지정 및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정부·정치권·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생산시설(팹·Fab)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규제 해소, 국가 지원 확대, 지역 간 상생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15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반도체 산단 예정지가 현재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조성 및 팹 건설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정부와 특별시는 이전 부지 확정과 신기지 건설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군공항 임시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전 일정이 단축될지 주목된다.

군공항 이전은 클러스터 전체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국방부와 특별시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전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산단 조성 및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 단축도 시급하다.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대가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사업이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부지 조성 등 실제 착공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팹 건설과 전력망·용수 시설 구축 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기반시설 공급이 공장 건설보다 늦어지면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역시 필수 조건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송전선로와 변전소, 산업용수 공급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비 분담 규모와 지원 시

기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요구된다. 군공항 이전부터 국가산단 조성, 전력망 확충, 기업 투자까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얹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부처 간 조율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넘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투자의 효과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할 상생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과 대학·연구기관, 전남의 에너지·소재산업 기반을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설계·연구개발과 AI의 접점을 넓히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로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의 투자계획이 연관기업의 추가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과 체계적인 인재 양성은 물론 주변 산업단지와 교통·정주 여건을 연계한 종합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투자 구상을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구축, 기업 투자, 연관산업 육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 5개 구청장 “조정교부율 27%로 상향을”

시·군과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재건의
균형발전기금 내 자치구 몫 확보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재정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별도 지원 자원 확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10월 정례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시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자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 보통세의 23.9%에서 27%로 높여줄 것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교부율을 현행보다 3.1포인트

올려 자치구에 배분되는 재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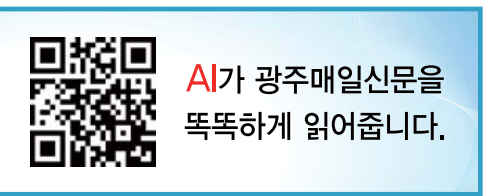
균형발전기금 내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 위한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기금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지원 재원을 별도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 같은 요구는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는 자치구가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낮아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5일 민행배 특별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교부율 상향을 건의했

다. 당시 민 시장은 자치구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시장은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적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곶시장 “특별시 안착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광주시민단체협 후원발집 행사 참석
“시민사회 제안·비판 적극 수용할 것”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5일 ‘20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후원발집’ 행사에 참석해 “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민사회의 제안과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선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시민사회 연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1998년 출범 이후 지역 발

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토론회 개최 등 지역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 시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인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속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제안과 비판을 적극 수용해 참다운 시민주권 도시를 만들고 시민단체협의회와 소통·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운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특별시의 안착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도 본연의 견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화답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Jeollanamdo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순해보임협회